해상풍력단지 전북도 정책혼선 질타

최인정 도의원 5분 발언 도 MOA 불참에 "군산 경제현실 외면"… 송 지사 "영향 꼼꼼히 따져봐야"

전북도의회 최인정 의원이 9일 도의회 5분 발언을 통해 새만금 해상풍력단지와 관련해 전북도의 정책혼선을 질타했다.

최 의원은 도가 지난 6일 해상풍력 발전산업 합의 각서(MOA) 체결에 돌연 불참을 통보하면서, 해상풍력과 조선업 수주물량 감소로 위기에 빠진 군산지역 경제활성화와 관련해 정책 혼선을 드러내고 있다고 비판했다.

전북도는 새만금 내부의 해상풍력단지가 새만금개발계획과 맞지 않고, 전북에 이익이 되지 않는 사업이라는 이유 등으로 합의각서 체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이러한 도의 태도에 최인정 의원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도가 새만금개발청과 정치적 대립과정에서 애꿎게 군산의 어려운 경제현실이 외면 받고 있다며 도정의 인식변화를 촉구했다.

최인정 의원은 지난해 7월과 11월 두 번에 걸쳐 긴급현안 질문과 12월 5분발언 등을 통해 조선업 불황으로 어려움을 겪는 군산지역 업체들을 지원하기 위해 풍력단지 조성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했다.

당시 도는 최 의원 지적에 대한 답변에서 "도내 조선관련 업체가 풍력단지 조성 하부구조물 제작에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합의각서(MOA) 문안에 구체적인 참여방안을 포함하여 추진하겠다"도 답변했다.

하지만, 최 의원은 전북도가 답변은 이렇게 해놓고, 결국 지난 6일 합의각서 체결에 불참했다며 앞뒤가 다른 도정운영을 지적했다.

최 의원은 "도와 군산시는 합의각서 변경을 외면하고 각서 체결 하루 전 일방적인 통보로 참여하지 않았다"며 날카롭게 질타했다.

그는 "도와 새만금청 간의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른 갈등이 아니고서는 불참이유를 납득하기 어렵다"며 "이러한 관계 때문에 더욱 침체되어가는 군산의 지역경제를 나 몰라라 하는 행정을 이해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상호 신뢰 속에서 구축된 MOA가 실현되지 않을 경우 고사되는 지역의 협력업체들을 위해 싸워 줄 전북도는 없다는 것이 분명해졌다"고 소리를 높였다.

최인정 의원은 "수백억씩 퍼주고도 떠난다고 하면 그만인 대기업들의 지역업체 모르쇠 풍토에서 행정적 협조만이라도 바란다는 MOA 체결에 도리어 도가 적극 투자를 약속해야 하는 거 아니냐"면서 "정치적인 문제를 도민의 삶이 걸린 문제와 결부시키는 것은 그릇된 행정이며 도민을 외면하는 처사"라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해상풍력 유치는 불황속에 있는 조선관련 업체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임과 동시에 열악한 지방세수를 확보하는 방안"이라면서 "예상되는 지방세수 만 향후 10년간 수백억에 달하고 직간접적인 일자리 창출을 통한 세수확보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다"며 전북도의 인식이 변화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한편 송하진 지사는 "신재생에너지라는 차원에서는 인정 하지만 새만금에 들어와야 할 이유가 없다"며 "해상풍력단지의 경제적 성과 분석과 새만금 전체에 미치는 영향을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고 신년 기자회견장에서 밝혔다. /안재용 기자

농번기 공동급식 대상마을 모집

내달 28일까지 신청 접수… 선정시 240만원 지원

전북도가 농번기 공동급식 대상마을 신청을 받는다.

9일 전북도는 "농번기 공동급식 지원사업을 지난해 140마을에서 올해 160개 마을로 확대 시행하고, 희망마을을 대상으로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사업대상은 공동급식 기반시설을 갖추고, 20인(人) 이상 공동급식이 가능한 마을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사업을 희망 하는 마을은 2월 28일까지 시군 읍.면.동 사무소에 신청하면 된다.

신청한 마을은 시군 '농번기 공동급식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군별로 배정된 사업량 범위내에서 사업대상 마을로 선정된다.

사업대상으로 선정된 마을은 연간 40일 이내에서 공동급식에 필요한 조리원 인건비와 부식비 240만원(40일 기준)이 지원된다.

도 관계자는 "사업대상 마을의 다양한 의견을 받아 사업을 보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농번기 공동급식 지원사업은 2015년 삼락농정위원회에서사업을 제안해 지난해 처음 도입.시행된 사업으로 공동급식을 시행함으로써 가사와 영농활동을 겸하고 있는 여성농업인의 근로부담이 경감되고, 마을 공동체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안재용 기자

도의회, 새해 의정활동 시작

전북도의회가 9일 군경묘지 참배를 시작으로 새해 의정활동에 들어갔다.

황현 의장과 도의원들은 이날 오전 9시 전주 군경묘지를 방문해 헌화와 분향 후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을 했다.

군경묘지 참배행사는 호국영령의 넋을 위로하고 새해에는 전북의 가치를 높이는 협치 의회에 더욱 매진하겠다는 의지를 다지기 위해 마련됐다.

황현 의장은 "새해에는 우리사회가 무너진 상식을 복원하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으로 탈바꿈하기를 기원한다"며 "우리 도의회도 전북이 재도약하고 도민 모두가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한편 도의회는 9일 오후 2시 제339회 임시회 개회식을 열고 5일간의 의정활동에 들어갔다. /안재용 기자

전북도의회 임시회 개회 9일 오후 2시 도의회 본회의장에서는 송하진 도지사, 김승환 도교육감 및 관련인들이 참석한 가운데 제339회 전북도의회 임시회를 개최했다.

전북형 취업지원사업 참여자 모집

도, 청년 · 중장년 취업지원 추진… 31일까지 신청 접수

전북도는 청년.중장년 일자리 창출과 기업의 인력난 해소를 위한 전북형 취업지원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전북형 취업지원사업에는 도내 청년 500명에게 취업기회를 제공하는 '청년취업지원사업'과 중장년을 대상으로 운영하는 '4050 중장년 취업지원사업'이 있다.

이번 사업은 도내 상시근로자 5인 이상으로 상시고용인원 외에 추가로 채용하고자 하는 기업에서 근로자수의 30%범위(중장년 40%범위)까지 지원하게 된다.

이는 3개월간 수습기간을 거쳐 정규직으로의 전환을 조건으로, 청년 취업지원은 도내 청년을 고용한 기업이 월 급여 160만원이상 지급 시 월 50~80만원(대기업 60만원), 4050 중장년 취업지원은 중장년층을 대상으로 고용한 기업이 월 급여 140만원이상 지급 시 월 60만원씩 최대 1년간 지원한다.

또한 사업에 참여한 청년 및 중장년층 취업자의 장기근속을 유도하고자 2년간 최대300만원(중장년 최대200만원)의 취업장려금을 지원키로 했다.

도내 취업을 희망하는 청년 및 중장년층 구직자들은 31일까지 사업에 참여하는 기업에 직접 또는 온라인(www.1577-0365.or.kr/young)으로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참여기업은 신청 구직자를 대상으로 채용절차를 진행하게 된다.

도 관계자는 "이후에도 기업의 수요에 따라 시.군에서 구직자를 연중 수시 모집해 구직자와 기업의 안정된 고용을 위해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안재용 기자

도, 문화재 보수정비 국가예산 326억원 확보

지난해 대비 33% 증가

전북도가 '2017년도 국가지정문화재 보수정비사업' 예산을 역대 최대인 326억원을 확보했다.

이는 지난해 대비 33% 증가한 것이며, 처음으로 300억원대 예산에 진입하는 쾌거를 이뤘다는데 큰 의미를 부여했다.

지난 9월 문화재청에서 사전통지된 예산은 264억원으로 확정됐으나, 도와 시군이 국가예산 대응팀을 구성해 10월부터 12월까지 문화재청에 수시로 방문해 사업시행의 당위성 등을 적극적으로 설명한 결과, 62억원을 추가로 확보하는 결실을 맺었다.

올해 국가지정문화재 보수정비사업은 전동성당 구조안전진단 및 익산쌍릉 발굴조사 등 총 109개 사업에서 진행된다.

세부유형별 분류는 문화재 보수 57건, 천연기념물(식물) 치료보수 13건, 초가이엉잇기 5건, 발굴조사 6건, 종합정비계획 수립 4건, 정밀실측 및 단청기록화 8건, 안전진단 및 구조보강 4건 및 기타 토지매입 등 12건이다.

또한, 2017년도 지자체 합동평가 지표인 '2016년 문화재 보수정비사업 국비집행율'에서 전국 1위를 달성했으며, 국비집행율에 의거 국가예산 인센티브 부여하는 문화재청 방침에 따라 2018년도 문화재 보수정비사업 국가예산 확보에도 청신호가 켜졌다.

아울러, 문화재 보수정비사업과 별도사업인 '2017년도 백제역사유적지구 세계유산 보존관리사업'에서도 지난해 예산 36억원 대비 35억원이 증액된 71억원을 확보해 미륵사지 및 왕궁리유적의 관람환경 개선, 유적정비 및 통합방범시스템을 구축하여 세계유산을 체계적으로 보존 관리할 예정이다. /안재용 기자

AI 반복 발생 농장 · 지역 가금류 사육 제한

정부가 고병원성 인플루엔자(AI)의 재발 방지를 위해 AI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농장 및 지역에 대해 무분별한 사육확대를 막기로 했다.

철새도래지 인근 지역도 사육제한을 유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이준원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은 9일 브리핑을 통해 "AI 재발방지를 위해 단기간은 농장별 매몰지를 사전에 확보하거나 지역 내 살처분 인력 동원 체계를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며 "제도 개선 검토과제로는 방역주체의 책임방역을 뿌리내리기 위해 농가, 계열업체에 대한 방역에 대한 신상필벌을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AI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농장이나 지역에 대해서는 정책 자금의 지원 시 불이익을 받도록 해 무분별한 사육을 막겠다는 취지다. /안재용 기자

희망 2017 나눔캠페인 기부자명단

▲진안읍

△노계3동	700,000
△인구1동	270,000
△학인2동	350,000
△상가막마을	200,000
△종평마을	202,000
△언긴마을	300,000
△대성동(원마리)	250,000
△부곡마을	200,000
△대성동(연장리)	330,000
△대광1동	250,000
△대광2동	350,000
△유산마을	160,000
△산양마을	190,000
△대언장마을	90,000
△원반월마을	400,000
△인구2동	210,000

**계 4,452,000원